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대만의 탈중국화운동

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

박병석
서울사이버대학교

◆ 논문 요약 ◆

이 글은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1945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의 중화민국 국민당정권을 식민정권으로 규정하고 1990년대 말기부터 10여 년간 전개한 탈중국화운동(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을 분석하였다. 대만의 탈중국화는 탈식민주의의 한 형태, 한 사례로 인정하며, 탈식민주의가 단순히 반서구문화가 아니듯이, 대만의 탈중국화도 단순한 반중국화가 아니며, 중주-부속, 식민-피식민, 중심-주변, 자아-타자 등 주객의 이원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고 대만을 주체로 하는 체제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만의 '탈중국화' 담론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자면,

대만은 중국문화와 달리 개방되고 진보된 해양문화라는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중국문화는 대만문화의 일부일 뿐이다; 중국문화는 보수적이고 낙후한 대륙문화로서 대만은 중국문화에 정체감을 갖지 않는다; 중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은 중국에 이용되어 문화패권을 행사하게 만든다; 역사, 언어 및 종족 등에 대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 형성을 통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민족 국가의 건립이 탈중국화의 최종 목표이다.

* 주제어: 탈식민주의, 대만, 탈중국화, 본토화운동, 정명운동

I. 머리말

1. 연구 동기

2000년 3월 대만의 야당인 민진당 총통 후보 진수편(陳水扁)이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되면서 반세기에 걸친 '중국국민당' 일당독재가 '중단' 되었다. 이는 그동안 삼민주의 옹호, 중화민족문화 부흥, 대만독립 반대, 중국통일 촉진 등 중국 중심의 정책을 통해 대만의 가치와 문화를 말살하여 대만을 '재식민화' (再殖民化) 하였던 '중국국민당' 정권이 대만 출신 이등휘(李登輝)를 총통으로 내세워 본토화(本土化) 정책을 추진한 것이 계기였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KRF-2008-327-B00455).

과거 ‘국민당 바깥’이라는 의미의 당외(黨外, outside the party)로 불리던 인물들은 1978년 12월 25일의 「국시성명」(國是聲明)으로 ‘대만인민자결’을 주장했고, 1986년 9월 28일에는 “대만의 전도(前途)는 마땅히 대만 전체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대만주민자결’을 표방한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民進黨)을 결성하였다. 그 후 민진당은 자체의 ‘주민자결’과 국내외 대만독립 단체(臺灣政治受難會事件聲援會, 臺灣民主運動海外組織, 世界臺灣同鄉會聯合會, 臺灣獨立聯盟, 臺灣建國聯合陳線, 臺灣基督長老教會 등)의 ‘대만독립’ 양자 사이를 오가다가 2000년 5월 집권하면서 대만독립 지향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1990년대에 탈식민주의(脫植民主義, 後殖民主義, post-colonialism)가 도입되어 ‘포식민지’ 대만의 ‘탈식민화’(脫殖民主化, 去殖民主化, 非殖民主化, 抵殖民主化, de-colonization)와 ‘탈중국화’(脫中國化, 去中國化, de-sinicization)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1987년 7월 15일 계엄 해제에 이어 1988년 1월 13일 대만 출신 이등회가 총통에 취임하면서 점차 확산된 본토화(本土化, indigenization)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대만독립 지지자들의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본토화운동(本土化運動, localization movement, nativistic movement, taiwanization)으로 확산되었고, 그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의 일환으로 정명운동(正名運動, name rectification campaign)이 전개되었다.

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은 반대파로부터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탈중국화’ 운동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본토화운동가 및 정명운동가들은 ‘탈중국화’라는 용어를 삼가고 있으나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탈중국화’가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용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문화 또는 중화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중국 역대 왕조와 종번관계(宗藩關係, suzerain-vassal relationship) 또는 종속관계에 처했던 국가들(베트남, 남북한 및 몽골 등)이 중국문화 또는 중화문화의 정통 및 패권 지위를 제거하고 자신의 민족 정체성, 문화 및 언어를 건립했던 경험은 대만의 새로운 탈중국화 시도와 성과 및 향방을 평가할 수 있는 거울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앞의 국가들이 중국에 의한 재식민화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및 대만 연구에는 그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저항독법(resistance reading)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위법적 읽기(contrapuntal reading)가 필요하다. 대위법 읽기는 악보를 읽을 때 처럼 텍스트의 표면(말한 것)과 이면(암시된 것) 또는 콘텍스트를 동시에 파악하는 읽기 방식이다. 게다가 텍스트 밖의 역사 및 현실과의 맥락관계도 파악해야 한다. 이 글은 중국 및 대만에 대한 이러한 ‘저항독법’과 ‘대위법적 읽기’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중국에 대한 저항독법과 대위법적 읽기의 하나로 그리고 대만의 언어 표기법도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 또는 화어(華語) 표기는 우리 한자 발음에 따르고자 한다.

2. 관련 개념 및 선행 연구

대만에서 ‘탈중국화’(去中國化)라는 어휘는 통일론자들(泛藍聯盟)이 ‘대만본토화운동’을 폄하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기에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본토화론자들(泛綠聯盟)은 대만본토화라는 어휘를 선호한다. 물론 대만의 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을 모두 탈중국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대만의 탈식민주의론자나 본토화론자들은 탈중국화는 중국사와 중국문화의 완전 부정이나 중국 언어 및 문자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고 전 사회에 뿌리 깊은 중국의 부호와 신화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탈중국화는 탈식민주의에서 다루는 탈식민화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만의 탈중국화는 탈식민주의의 접근법을 원용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식민주의란 “근대에 들어와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친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모국어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금 스스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시작한 새로운 인식이자 강력한 인식론적 운동이다.”(김성곤, 1997, 82).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탈’(post)이란 접두어가 지닌 ‘~이후에 오는’(coming after) 것이란 시간적 의미와 ‘~를 넘어서는’(going beyond) 탈피 또는 극복이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박종성, 2006, 7).

탈식민주의 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식민세력의 주재(主宰)를 거절하고 식민자 중심의 담론을 거절하는 것이다. 식민자 중심 담론의 지배적인 위치, 즉 중심 또는 정전(正典, canon) 위치를 거부하는 탈중심(de-centering)이 탈식민 담론의 원동력이다. 이런 점에서 대만의 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 및 담론은 중국과 대만을 식민과 피식민, 패권(중주)과 종속, 중심(center)과 주변(邊陲, periphery)의 관계로 보고, 대만의 중국으로부터의 이탈, 즉 탈중국화가 원동력이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중국을 타자화시키고 대만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했다. 그 작업은 ‘중국’의 해체로부터 시작했다. 탈식민주의의 중요 원동력인 탈중심화는 원래는 중심의 ‘해체’(解構, de-construction)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와 비교되는 탈식민주의는 오히려 새로운 중심 또는 주체의 ‘재건’(重構, 重建, re-construction)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만의 탈중국화와 민족국가 건립의 이론적인 추동력은 각각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로 이원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해체’는 탈식민주의의 목표라는 점에서 ‘일련의 탈식민주의’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토화(本土化, 在地化, localization, nativization, indigenization)는 원래 세계 수준에서의 상품, 소비, 문화, 가치관 및 행위방식의 수렴(convergence)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화(全球化, globalization)와 상대적인 어휘이다. 본토화는 “사회나 국가가 강력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외래문화의 충격 때문에 해당 사회 본래의 감정 표현, 개체의 심신 상태 및 사고·인지·이해 모델이 현저하고 엄중한 위협을 받았을 때 제기되는 행동 지표이다.”(莊萬壽·林淑慧, 2003, 38). 이에 따라 본토화는 “현지(本地)에 적합하고, 현지에 근거하고, 현지에 정체성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또는 현지 특색을 지닌 사물로 발전하는 것을 가리키며, 동시에 점차 외래의 영향을 점차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陳孔立, 2005, 62).

대만의 경우, 정치상의 본토화는 국민당 외래정권을 물리치고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를 벗어나 대만인들이 다시는 외부인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다. 정치상의 본토화는 또한 다수를 차지하는 대만인(본성인)이 정치에 참여하여 주인이 되며, 정치인물은 기층으로 파고들어 기층에 뿌리를 내려 다수인 본성인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문화상의 본토화는 본토문화(在地文化, local culture)에 대한 주체의식을 갖고 본토문화 가치를 긍정하는 것이다. 대만의 본토화와 정명은 거칠게 현대 대만사회문화 속에 잔존한 ‘중국성’(中國性, chineseness)을 제거하는 ‘탈중국화’이며 ‘대만성’(臺灣性, taiwaneness)을 회복하려는 ‘대만화’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본토화운동은 “대만을 주체로 하여 외래 억압 또는 지배에 항거하는 정치·사회·문화적 주장의 제창, 추진 및 실천을 널리 가리키는”(楊長鎮, 2005, 41)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토화는 탈식민화와 같은 범주의 개념이고, 본토화의 반대 개념은 식민화 및 외래화(外來化)로 본다.

중화민국 국민당정부의 대만에 대한 ‘재식민’ 정책이 시작되면서 기업체, 공공기관, 도로 및 학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명명(命名, naming) 작업이 진행되어 대만의 중국화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토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정명운동은 중국화된 명명의 개명 및 회복 작업이다. 대만 정명운동이 추구하는 정명은 “잘못을 고쳐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昨死今生) 식민자가 남긴 기억을 제거하고 구정권이 남긴 흔적을 삭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종의 자신의 자아선언으로서 대만섬의 모든 주민을 ‘대만민족’으로 주조(鑄造)하고, 대만을 현대 ‘민족국가’(nation-state)로 건립하기 위한 서곡이다.”(施正鋒, 2002, 22).

대만의 탈식민, 탈중국화, 본토화운동 및 정명운동 등은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인지 한국에서 이들을 개별 주제로 다루거나 연계하여 다룬 연구 성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만 등지에서도 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을 체계적으로 다룬 글을 찾을 수 없었고,¹⁾ 또한 탈식민주의와 본토화운동 및 정명운동과의 연계 작업도 없고, 다만 본토화와 정명이 탈식민 현상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자료 수준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추후 연구자에게 추가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기존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다룬 탈식민주의 담론이 과거의 “식민주의를 비판적 시선으로 읽어

1) 아래에서 다룬 문학의 탈식민주의와 본토화 담론 관련 논문 외에 5편이 있으나 2000년대 이후의 것이며, 이론화를 초보적으로 시도한 楊長鎮(1995) 외에는 내용도 산만하고 수준이 낮다: 石之瑜, “臺灣本土化論述的當代緣起,” 『展望與探索』, 1:4(2003), 73-84; 楊長鎮, 2005, 39-62; 林謙宏, “以葛蘭西的文化霸權分析國民黨的中國化與民進黨的本土化運動,” 『教育社會學通訊』, 56(2004), 12-17; 莊萬壽·林淑慧, 2003, 27-62; 趙慶華整理, “黨外運動與臺灣本土化座談紀實,” 『島語:臺灣文化評論』, 1(2003), 73-105; 黃嘉汶·鈺淳, “探民族主義下‘本土化’與‘去中國化’之定位,” 『興國學報』, 3(2004), 183-194.

내려는 ‘대응담론’”으로서(박종성, 2006, 4) “억압과 착취를 낳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 또는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주의 또는 식민화를 극복하는 방법과 실천으로서의 저항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탈식민주의는 본질적으로 비판이론이지, 해체이론(解體理論)이 아니다. 따라서 탈식민주의자들의 탈식민론은 대부분 식민주의, 식민담론 및 지배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 식민해방이나 독립 이후 피식민자들의 탈식민의 저항담론, 방법,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대만의 탈식민주의와 탈중국화운동(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의 ‘이론적인’ 연계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대만의 탈중국화를 분석하면서 탈식민주의론의 원용 가능성과 적합성에 한계를 인정하되 대만의 탈중국화운동이 탈식민주의론에서 다루어지는 ‘식민 이후’(post-colonial)에 진행되는 현대 정치사상사적인 의미의 ‘탈식민’ 현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대만의식 담론과 탈식민주의 담론의 전개

1. 대만의식 담론과 본토화

2000년대 대만의 탈중국화운동은 주로 본토화운동(本土化運動)과 정명운동(正名運動)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계엄 해제 이전인 1983-1984년간 진행된 대만의식논쟁(臺灣意識論爭)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대만 본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불길을 당긴 것은 전 세계 화인(華人)들의 ‘중국의식’을 고취시킨 「용의 후손」(龍的傳人)을 부른 가수 후덕건(侯德健)이 1983년 6월 4일 대만에서 북경으로 잠입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대만의식과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당외잡지(黨外雜誌)를 통해 대만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전개했다.²⁾

그때는 아직 국민당 강권통치 시기였기에 사회 전반에 ‘중국관념’과 ‘중국의식’이 강세를 이뤄 ‘대만의식’이나 민족 정체성(國族認同, national identity)의 가치를 직접 내걸지 못하였고, 때문에 논쟁은 수위를 낮춘 ‘대만결’(臺灣結, 대만정서, taiwan complex) 대 ‘중국결’(中國結, 중국정서, china complex)의 대결 형식으로 전개되어 ‘대만결과 중국결 논쟁’이라고도 불리었다.³⁾ 이것

2) 시작 단계의 논쟁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施敏輝編, 1998; 陳昭瑛, 1995, 24-29.

3) 대만결의 속성에는 무력혁명에 의한 대만독립, 민족자결, 주민자결, 현상유지, 대만화, 본토화, 중공의 대만통일 반대, 대만의식, 대만 향토문화에 대한 긍정과 발양 등이 있고, 중국결에는 극단적인 범중화민족주의(泛中華民國主義), 여러 가지의 통일론(일국양제, 삼민주의통일중국 등), 중국문화에 대한 정체감과 중국문화에 대한 회귀

이 더욱 확대되어 전개된 대만의식논쟁은 당시의 금기를 많이 타파하여 대만본토화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대만의식(taiwan consciousness)의 개념 정의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주민의식·향토의식·성적의식(省籍意識)·운명공동체의식·주민자결의식·대독의식(臺獨意識) 등 다양한 사회의식이 종합된 것으로(韋政通, 1994, 290-296; 郭洪紀, 2002, 261) “자신이 대만인이라고 여기는 의식”(the consciousness of being taiwanese), 즉 ‘대만 정체성’(taiwan identity) 또는 ‘대만인 정체성’(taiwanese identity)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施正鋒, 1999a, 59-86; 1999b, 1/8-8/8).

한편, 현실 정치에서는 1988년 1월 국민당적 총통 장경국(蔣經國)을 계승한 대만 출신 이등휘(李登輝) 총통의 국민당내 지위가 확고해지면서 ‘본토화’와 ‘대만 우선’ 발언과 정책이 이어졌다. 그러나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의 중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본토화와 ‘일중일대’(一中一臺) 및 ‘두 개의 중국’과의 연계를 부정했다. 정계에서 주요 논제가 되어오던 ‘본토화’는 1996년 제1차 총통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대만에 대한 충성도를 검증하는 도구가 되었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 개인과 정당이 대만을 사랑하는지를 검증하는 도구, 즉 ‘대만 정체성’과 동의어가 되었다. 그 후 ‘본토화’는 정계와 언론계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방면 변화의 최고 지도 원칙이 되었다.⁴⁾

2. 탈식민주의 및 본토화 담론의 전개

1987년 7월 15일 「대만성계엄령」 해제(1949.5.20-), 1991년 5월 1일 「헌법」을 초월하여 전국 자원을 반란 진압 군사활동에 지원토록 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臨時條款, 1948.5.10-) 종료 선포 및 1991년 5월 22일 인권탄압의 대명사였던 「정치반란조례」(懲治叛亂條例, 1949.6.21-)의 폐지에 따라 민주화와 자유화가 진척되었고, 1992년에 이르러서는 정치학계가 아닌 문학계에 탈식민주의가 등장하였다. 대만 문학계에서 진행된 탈식민주의 논쟁은 그 후에 전개된 대만의 탈중국화운동, 즉 대만의 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에 이론적인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대만의 탈식민 담론자들(예: 廖炳惠, 廖朝陽, 邱貴芬, 陳光興, 陳芳明(필명 施敏輝)·宋冬陽) 등은 계엄 해제 후 대만은 비록 ‘탈식민’ 시대로 들어서서 국민당 정권은 이제 ‘식민자’ 신분을 벗어났지만 그 영향력이 계속 ‘잔류’하여 그 정치세력이 대만사회에 뿌리를 굳게 내려 정치·사회 및 문화의 흐름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과거 몇 백 년의 대만의 역사·문화·정치 및 경제 등은 모

등이 있다. 邱垂亮, 1987. 대만결과 중국결 논쟁 중 1987년 8월 22일 연합보문화기금회와 중국논단사 공동으로 열린 ‘중국결과 대만결 세미나’가 주목을 받았다. 中國論壇社, 1987a, 1-202; 1987b, 10-25.

4) 본토화운동의 발생 과정은 다음을 참조: 黃瓊菘, 2005, 28-34.

두 외래 식민자와 본토 피식민자 사이의 문화 및 언어의 충돌과 교류의 상호작용 모델에 기초하였음을 강조하였다.⁵⁾ 그들에게 국민당정부의 대만 지배와 중국화는 식민제국주의와 다르지 않았다. 국민당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급한' 대만인들을 '개화된' 중국인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 식민자들은 피식민지의 본토문화를 배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만 본토문화의 발전을 억압하고 파괴하여 피식민자의 민족의식을 와해시키려고 했다고 본다. 따라서 탈식민화 시기의 대만 지식인들은 식민경험이 발생시킨 문화 곤경을 탈피하고 본토문화를 보존하고 건립하기 위해 '탈식민' (去殖民)의 본토화운동을 전개하여 '식민자'의 외래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본토문화'에 대한 정체성으로 전환시키고 '피식민' 이전의 '본토문화'를 발굴하고 '식민자'의 문화패권에 대항하여 '탈식민'의 '본토문화'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만 학계의 탈식민주의 및 본토화 담론은 주로 1990년대 이후 그동안 미국의 '문화식민지'로 평가받던 외국문학(外文系) 학자들이 『중외문학』(中外文學) 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1992년 5월 전국비교문학회 세미나에서 구귀분(邱貴芬)이 서구의 탈식민주의를 빌어 전통 중국 중심 문학사관에서 벗어난 대만문학 정전(正典, 典律, canon) 재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아울러 본토문화 재건운동에 관련된 언어 문제를 다루면서 호미 바바(Hommi Bhabha)의 문화 잡종성(雜種性, 混種, hybridity)과 흉내내기(學舌, mimicry) 개념을 원용하여 본토론자들이 '국어'를 배척하고 '본토' (즉, 福佬)와 '순종' (純種) 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하였고, 대만 '국어'를 '외래어'로 삼아 적대시하지 말고 '대만의' 언어로 삼아 서로 다른 모어(母語)를 가진 종족간의 소통도 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토화운동에 찬성하면서도 '본토'가 남민인(閩南人)의 '복료' (福佬)로 축약되는 것과 본토화운동에 잠재된 '복료 쇼비니즘' 경향을 반대했다(邱貴芬, 2000, 4/22).

1992-1994년 사이 '대만문학'의 본토화 및 위상(定位) 정립을 주장하는 본토론자가 대만문학의 부재와 대만문학의 중국문학 일부분설을 주장하는 중문학자와 논쟁을 벌였지만 본토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⁶⁾ 그 후 1995년 2월부터 1996년 10월 사이 『중외문학』(中外文學)에서 해외문학자와 중국문학자간의 대만문화논쟁이 전개되었는데, 대만 정체성과 주체성 외에 종족문제, 탈식민 문제, 주체성 및 언어·문화의 혼잡(混雜, 雜種)과 다원성 등 비교적 순이론 문제들이

5) 그 이전부터 일부 인사들이 대만을 식민지로 규정하였지만 탈식민주의 이론에 의해 규정하거나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로 다음이 있다. 史明, 1980, 82; 史明, 1988, 41-101; 史明, 2001, 47-49. 그리고 대만의 '탈식민'의 시기에 대해 중국에 정체성을 지닌 탈식민 담론자는 1945년 대만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로 볼 것이고, 대만에 정체성을 갖는 탈식민 담론자는 1987년 계엄 해제 이후로 볼 것이고, 원주민·노동자·여성 등 소수자에게 관심을 갖는 담론자는 계속 식민 시기로 볼 것이다. 邱貴芬, 2000, 9/22. 그러나 여기서는 1987년 계엄 해제 이후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6)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 游勝冠, 2006, 3/17-7/17.

다뤄졌다. 이 논쟁은 1995년 2월 『중외문학』(中外文學) 지에 진소영(陳昭瑛)이 중국 민족주의 입장에서 「대만의 본토화운동을 논함」(論臺灣的本土化運動)을 발표하여 대만의 본토화운동은 ‘후진적이며’, ‘대만독립의식은 중국의식의 소외(異化)이며 ‘자아소외’(自我異化, self-alienation)라고 비판하면서 담론의 장이 열렸는데(游勝冠, 2009), 논쟁은 이듬해 10월까지 이어졌다.

우선, 중국 중심론자인 진소영은 대만사회의 ‘대만의식’ 담론이 1990년대에 이르러 ‘대만 주체성’ 담론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진방명이 1991년 대만문학사관을 정립하면서(陳芳明, 1991: 1994, 222-234) 언급한 ‘대만 주체성’의 이론 기초는 중국/대만, 중심/주변, 외래/본토, 비독립(귀속)/독립, 비주체성(피식민)/주체성 등 6개 조(組)의 이원대립의 개념으로서, 이원론의 배제 기능으로 대만의 탈중국화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진소영에 따르면 “독립과의 전제는 대만과 중국을 대립시키고, 또 중국과 주체성을 대립시켜 ‘대만의 주체성’을 건립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성’(中國性)을 배제시켜야 한다.”는(陳昭瑛, 1995, 32) 것이었다. 진소영은 “모든 외래성(外來性)을 배제하려면 네덜란드성, 일본성 및 미국성도 모두 일일이 배제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대만성’(臺灣性)에는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대상성’(對象性)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주체성’을 건립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불가능하다.”고(陳昭瑛, 1995, 32) 하였다. 진소영은 중심과 주변(邊陲) 관계에 대해 “사실 정치상 ‘중심’은 늘 노후, 권위, 반동 및 보수 등 부정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주변’은 진보, 개혁, 해방 및 신생(新生) 등 긍정적인 가치를 의미하는데,대만은 ‘주변’에 위치하여 부패한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한한 생명력을 간직하게 되어 민주화가 가장 일찍 시작된 지역이 되었다. 그럼에도 독립과는 줄곧 주변에 있는 것에 극도로 초조해하고 주변 지위를 탈피하여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한다.”고(陳昭瑛, 1995, 33) 비난했다.

요조양(廖朝陽)과 장국경(張國慶)은 『중외문학』 3월호에서 진소영에게 반론을 제기했다. 장국경은 ‘본토’라는 것이 ‘중국문화의 대만에서의 유산’이라는 것을 다소 의미하고, 대만 할양 이후 “중국의식은 대만의식의 유기적인 구성 부분이 되었다.”는 진소영의 주장에는 조건적으로 동의하지만 대만문화는 이미 4백년 간 흡수와 융합 과정을 거쳐 이미 자주적이고 독특한 문화체계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張國慶, 1995, 128). 장국경은 진방명이 제시한 중국 중심과 대만 주변이라는 이원대립 개념을 비판함과 동시에 진소영이 중국 역사를 권위와 보수 이념의 중심으로, 그리고 대만 역사를 개혁과 해방 이념의 주변으로 인증(印證)하면서 대만이 다행히 주변에 위치하여 부패한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히려 비교적 일찍이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은 대만이 주변 위치에서 중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張國慶, 1995, 129)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대부분 같은 한민족(漢民族)이고 함께 정신문화를 누렸지만 문화와 역사의 변화 이후에는 대만은 대만이 되었고, 중국은 중국이 되었다고 했다(張國慶, 1995, 130).

4월에는 요조양과 장국경에 대한 진소영의 답변과 요조양을 지지하는 구귀분(邱貴芬)의 글이 실렸다. 여기서 구귀분은 요조양을 지지하는 동시에 얀모하메드(Abdul R. JanMohamed)의 마이너리티 담론(弱勢論述, minority discourse)과 탈식민주의사관에 근거하여 중국을 식민자로 규정하고 식민과 피식민 및 중심과 주변의 관계 틀에서 대만문학 백년이래의 풍격을 서술한 진방명(陳芳明)의 입장을 옹호했다(邱貴芬, 1995, 141-147).

5월에는 진방명의 진소영에 대한 반론이 이어졌다. 그는 일본 식민체제와 중국(중화민국) 계엄체제는 기술 차원이나 정신 내용에서 일맥상통하며, 대만사회의 역사기억 회복은 1987년의 계엄 해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陳芳明, 1995, 110, 112). 역사기억 회복은 발생했던 모든 활동을 다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인격, 신분, 목소리(聲音) 및 가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정리와 정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陳芳明, 1995, 112). 따라서 대만 신문학운동의 주요 성격이 '탈중심'(去中心, de-centering), '탈식민화'(解除殖民法, decolonization) 및 반패권(anti-hegemony)에 있다고 했다(陳芳明, 1995, 112). 진방명은 반일본, 반서구화 및 반중국의 공통 내용은 식민통치의 반대에 있으며, 대만인은 반인권, 반자유 및 반문명의 식민정권을 용납할 수 없으며, 대만의 국민당은 중국공산당의 대만 통치 대리인이기에 국민당의 식민주의와 중국공산당의 재식민주의에 반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陳芳明, 1995, 117-118). 진방명은 마지막으로 "대만 본토운동, 특히 문학본토운동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강열한 반식민 정신이다."라고(陳芳明, 1995, 118) 주장했다.

잠시 후 9월에 요성호(廖成浩)가 논전에 참여하면서 논전은 그와 요조양 사이의 논전으로, 그리고 주제는 대만 내부의 종족 문제로 넘어갔다. 이와 같이 진소영이 『중외문학』지에서 촉발한 논쟁은 대만과 중국 간의 피식민/식민, 주변/중심, 상대성/주체성, 대만성/중국성 등 관계에 대한 각파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본토화론에 대한 이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1990년대 몇 차례의 대만문학논전에서 우익 중국론자는 주류 문화의 '예술성', '학술은 학술로'(學術歸學術) 및 '사회 화해(和諧)' 등을 무기로, 좌익 중국론자는 혈연론을 무기로 삼아 본토론자를 공격했다. 한 중국론자는 본토론자를 비판하기를 "대만의 문화 주체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문화를 배척하여 대만 본토문화와 중국문화 사이에 근거 없는 대립 콤플렉스를 조장하고, 게다가 정치 이익에 사로잡혀 '본토화'를 정치 금자탑의 본존(本尊)으로 삼고 고의로 '탈중국화'(去中國化)를 주류 담론으로 삼아 대만 주체성을 건립하려 했다."고(黃麗卿, 2002, 356-357) 한다. 그리고 "독립파가 강조하는 '탈중국화' 담론은 주로 이른바 정권으로서의 중국을 전통문화로서의 중국과 동등시켰다. 이는 중공 정권을 반대하고 나아가 전통문화 중국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중국문화를 대만 역사문화 및 미래 발전으로부터 절연시키고 일방적으로 대만문화의 본토화와 현지화(在地化)를 강조하고, 종족성과 민족성으로써 본토에 정체성을 갖고 이른바 '종족민

족주의' (族群民族主義) 론을 형성하려 했다.”고(黃麗卿, 2002, 357)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본토론자들은 강한 역사감과 현실감의 우세를 이용하거나 관련 이론을 동원하여 방어하였다. 대만문학의 본토론은 “서구와 일본 등 제국주의 침입에 따른 강세(強勢) 문학의 지배적 영향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중국’에 통제받은 ‘중국의식’의 횡방 때문에 본토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游勝冠, 2009, 455) 한다.

1990년대 대만의 탈식민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 탈식민 담론이 본토화 담론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만의 본토화 담론자들이 탈식민 담론과 결합하면서 자신의 이론적인 기초를 심화시켰다.”는(邱貴芬, 2000, 7/22) 점이다. 아울러 본토화 담론은 대만문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로 확산되어 약세에서 강세로, 주변에서 주류로 변신하여 지배담론을 형성하였고,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이 진행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3. 탈식민주의 및 본토화 담론의 주요 내용

대만의 탈식민주의 및 본토화 담론의 주요 내용은 대만 주체성의 건립과 대만문화의 잡종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주체성과 관련하여 탈식민 담론은 ‘제국주의자 주체’의 외해를 추구하였다. 프란츠 파농(Frantz Omar Fanon)은 『검은 피부, 하얀 가면』(Black Skin, White Masks, 1952)에서 식민지 흑백 종족의 양극화된 대립관계에서 피식민자의 관념, 사회지위, 문화 정체성 심지어 자아 위치(定位)는 사실 모두 백인종 자산계급 식민자들이 통치관리를 위해 날조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피식민자들이 피부, 성별 및 심리 각 방면에서 박해받은 사실을 들추어내서 ‘식민과 피식민’ 및 ‘자아와 타자’의 구조관계를 역전시켜야 제3세계 피식민자의 문화 주체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孟樊, 1994, 163 재인용). 대만 본토론자에 따르면, 대만인의 문화주체는 선천성의 유전 성격과 아울러 식민 체제의 영향으로 새로 첨가된 문화성격, 즉 후천성도 갖고 있다고 한다(陳芳明, 1998, 131-132 재인용). 이에 대만의 문화주체성은 양난(兩難)에 직면하여 있다고 본다. 결국 중국성과 대만성의 선택에서 중국성을 극복하고 대만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탈중국화의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나타난 동양-서양에 대한 식민주의 담론의 이분법을 그 구조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어 해체하는 동시에, 제3세계 반식민 민족주의에 나타나는 피식민인의 정체성을 이분법적 대립구조에 고정화하는 것도 해체한다. 그는 특히 피식민지 문화의 잡종성(hybridity)을 주장했다. 피식민지인의 문화 정체성은 백지가 아닌 얼룩진 상처 위에 구축된다고 한다. 종주국은 피식민국을 지배하기 위해 피식민지인들이 종주국민을 모방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성을 인식시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따라하도록 하기와 구별짓기라는 양가적인 욕망을 작동시켜 피지배자를 ‘잡종’으로 만든다고 한다.

1992년 본토론자 구귀분(邱貴芬)은 지배자의 문화가 피식민인에게 강요될 때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혼합되어 혼종(混種)된다는 호미 바바의 ‘잡종’(雜種, hybridity) 개념을 원용하여 대만 ‘국어’(國語)가 혼종(混種)의 언어이듯이 대만문화는 사실 간문화(間文化, 跨文化, interculture)라고 했다(邱貴芬, 1992a, 156). 요조양(廖朝陽)은 ‘잡종’(실은 ‘複化現象’으로 번역)은 근본적으로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강세문화(強勢文化)에 ‘동화’(同化)된 것으로서 저항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自體)가 있어야 ‘복합화’(複化, multiplier)가 가능하고 ‘이질을 섞을’(雜入異質) 수 있다고 했다(廖朝陽, 1992, 57). 이에 대해 구귀분은 ‘문화융합’(cultural syncretism)이 야말로 이원론을 깰 수 있는 탈식민의 정신이라고 했다(邱貴芬, 1992b, 33-34).

대만의 탈식민주의자들은 대만문화에서 중국문화가 패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문화와 서구문화 등이 혼재된 혼합문화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들은 본질적이고 순수한 대만문화의 존재를 추구하거나 중국문화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만의 탈식민주의 담론의 개척자인 구귀분(邱貴芬)에 따르면 많은 탈식민 담론자들은 탈식민사회의 ‘반식민화’(抵殖民化) 운동은 결코 식민 이전의 문화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구귀분은 대만이 식민 본위의 신화를 깨트리는 동시에 ‘식민 이전의 정토정어(淨土淨語)로 회귀하려는’ 신화도 깨야 한다고 한다(邱貴芬, 1992a, 156).

진광흥(陳光興)은 “‘탈식민’(去殖民)의 의미는 협의(狹義)의 식민 시기로 ‘회귀’하여 ‘오염’되지 않은 과거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순종’의 ‘순수’의 주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식민주의 과정에서 강화된 보수 인자(因子)와 단일성·계층화된 사고들을 ‘제거’하고 역사 조우(遭遇)와 충돌 과정 중 깊이 박힌 반동 콤플렉스를 ‘해제’(解除)시키는 데에 있다.”고(陳光興, 1996, 76) 하였다.

사실, 인도 출신 영국작가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가 “식민지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국가로 성립되어 가는데 있어서 식민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에 의해 새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보다는 과거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상호 교환적 성격으로 파악한”(홍덕선, 2006, 180) 것처럼, 대만의 탈중국화도 중국문화와의 단절이 아닌 상호 교환적 성격으로 이해된다. 본토화운동과 정명운동이 추구하는 대만문화의 정체성은 “문화의 혼효성, 잡종성, 융합성, 상호 교환성의 성격을 갖는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인식에서”(홍덕선, 2006, 181) 출발한 살만 루시디의 입장과 같이 한다.

III. 본토화운동과 탈중국화

1. 대만의 재식민화와 본토화

연합군 태평양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위탁 명령으로 1945년 10월 25일부터 일본제국으로부터 ‘광복한’ 대만을 접수한 중화민국 국민당정부는 1947년 2월 28일 발생한 ‘228 대혁명’ (史明, 1980, 749-801)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1947년 5월 20일에는 「대만성계엄령」을 선포하였고, 1949년 11-12월에는 공산당에 패배하여 ‘국가’를 대만으로 이전하여 40여 년간 독재 통치를 시행했다. 주요 당정 직무는 국민당정부를 따라 1945-1950년간 대만으로 이주한 121만 명의 외성인(外省人)들이 담당했다. 입법원과 국민대회는 1947년 중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를 넘어 계속 담당하여 816만 명의 내성인(內省人)과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제대로 선출할 수 없었다.

국민당정부는 ‘중국 중심’의 언어정책, 문화예술정책 및 역사교육정책으로 대만인의 ‘중국화’ 및 ‘식민화’를 추진하였다. 한 예로, 국민당정부는 1956년 5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대만인의 모어(母語)인 민남어(閩南語, 鶴佬語), 객가화(客家話) 및 원주민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게다가 1966년 8월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중화문화가 파괴되기 시작하자 국민당정부는 그 해 11월부터 중화문화부흥운동을 전개하여 대만의 중국화를 가속화했다.

교육 방면에서, 행정장관공서(行政長官公署, 1945.9.1-1947.4.21) 교육처가 대만의 교육 업무를 장악하여 “삼민주의를 천양(闡揚)하고 민족문화를 배양한다.”는 교육 지침(宗旨)을 공포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민족정신 교육’, ‘유교 교육’ 및 ‘중문 교육’을 통해 대만인을 동화시켜 중국에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어 허구의 ‘중화민족’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중국어가 ‘국어’(國語)로 변신하여 대만인의 모어를 대신하였고, 언어에 내포된 동족관념과 문화가치의 교체 외에 이른바 ‘중화민족정신’과 ‘중화민족문화’가 밀도 있고 강력하게 학생과 대중의 뇌리에 심어졌다 (莊萬壽, 2003, 315; 莊萬壽·林淑慧, 2003, 34; 史明, 2001, 36-37).

국민당이 대만에서 민족정신 교육을 추진하면서 대만인들이 ‘중화민족’에 대해 새로이 정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민족정신을 공맹(孔孟)의 ‘유교사상’과 결합시키고 이를 민남인(閩南人)과 객가인(客家人)의 전통 유교신사사회(儒教士紳社會)와 접목시킬 수 있었던 데 있다. 장개석(蔣介石)은 먼저 사범대학의 필수과목으로 ‘사서’(四書)를 규정했고, 1956년부터는 고등학생에게 『중국어기본교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서’를 필수과목으로 규정했으며, 중학교 『국문』교재도 문학 가치가 있는 고전작품을 실었으나 역시 공맹을 논한 작품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국 고

대 성인 작품들을 숙독한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중국문화와 유가 등의 부호에 깊은 인식을 갖게 되고 아울러 문화일체감을 갖게 되었다(莊萬壽·林淑慧, 2003, 34-35).

전후 국민당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재편찬, 강의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대중국(大中國) 정체성'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였으며, '본토 정체성'과 '대만의식'의 혼도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대만의 전후(戰後) 문화는 '외래 신문화'와 '본지(本地) 구문화'라는 이원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중화문화 = 정통문화 = 진보문화 = 고급문화'와 '향토문화 = 지류문화 = 낙오문화 = 저급문화'의 문화 이원구조로 고착되었고, 또 정치의 이원구조 및 종족(省籍) 이원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楊長鎮, 2005, 44). 이는 결국 중국 전통 화이론(華夷論)의 재현이었으며 근대 서구의 식민제국논리의 응용이었다.

대만인에게 중화민족주의를 강요하던 국민당정부는 1978년 12월 미국의 단교 선언으로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압력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당외(黨外)의 저항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통일론'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독립 경향의 본토화와 대만화(臺灣化, '落實臺灣')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민당정부는 '당외' 인사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를 개선(改選)하였고, 교육에서 모어(母語) 교육을 장려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민진당 등 재야세력이 집권당에 본토화를 적극 요구하였고, 정권 교체에 따라 2000년부터는 집권 민진당정부가 본토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대만의 본토화운동은 여러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말에 시작된 사회 및 행위과학 연구의 중국화, 1987년 계엄 해제 후 시작된 사회과학 연구의 본토화 및 그에 이어지는 대만화·반중국화·탈중국화 움직임은 학술적인 본토화운동으로서 대만의 정치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를 본토화운동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하나, 이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참여자와 관심자가 일부 학계로 제한된 문제이므로 이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 외 논의에서 제외될 본토화 내용은 교육(교과서), 음악, 미술, 영화, 문학작품, 전설 및 TV프로그램 등의 본토화이다.

2. 본토화운동의 사례와 내용

총통부(總統府), 행정원(行政院) 교육부·국방부·외교부, 국민대회, 입법원(立法院) 및 고시원(考試院) 등 관방,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 등 정당 및 대만독립건국동맹과 대만정명운동연맹 등 민간단체의 공조로 추진된 본토화 및 정명을 통한 탈중국화에는 중국사 일부로서의 대만사로부터 탈피하는 탈중국중심사화(脫中國中心史化); 중정기념당(中正紀念堂) 개칭 및 장개석 동상 철거 등 탈장개석화(去蔣化); 국민당과 국가 권력기구의 분리를 꾀하는 탈당정유착(去黨國化); 국부(國父, 孫文), 신해혁명의 기원인 무창봉기(武昌起義) 및 진시황 등을 부정하는 탈중국민족주의화(去中國民

族主義化): 정부 기관, 기업, 사회단체 및 대학 등에 사용되는 중국 호칭을 제거하는 탈중국중심주의(去中國中心主義) 및 위의 여러 사항의 결합에 의한 탈중국화 등이 있다. 이러한 탈중국화운동은 탈식민주의 논쟁에서 제시된 탈식민 정신의 현실적인 실천운동이었다.

본토화운동의 추진 사례는 역사, 어문, 법률, 영토, 국가·정부조직과 대만인 신분 등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

1) 역사 분야

1997년 2월 국립편역관(國立編譯館)은 본토화 교육을 기치로 『인식대만』(認識臺灣)이란 중학교 교재를 배포했다. 교재는 '중국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만인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4백 년이래 외래통치자가 대만인을 억누른(欺壓) 비정한 역사"를 반복 언급하였고, 네덜란드인·일본인과 정성공(鄭成功)·청조를 모두 외래 통치자로 규정하였다.

2003년 7월 하순 교육부가 제정한 「일반고교 역사과정 잠정 강요 초안」(普通高級中學歷史課程暫行綱要草案)은 고1 1학기에 『대만사』(제1책)를 배우고 2학기에 『중국사』(제2책)를 배우도록 했다. 제2책인 『중국사』는 고대부터 명대 초기 정화(鄭和, 1371-1433)의 항해(1405-1433)까지 다루고, 15세기 명대 중엽부터 중화민국까지의 역사는 『세계사』 과목(제3-4책)으로 편제했다. 이로써 대만은 명대 중엽이후의 중국을 외국으로 보았고, 손문을 외국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후 여러 압력으로 중국사는 모두 제2책으로 통합되었다.

2005년 3월 3일 대만 고시원은 2006년 1월 16일부터 공무원, 국제신문종사자 등 9종 국가고시 보통 과목에서 『본국역사』·『본국역사여지리개요』(本國歷史與地理概要)·『본국사지대의』(本國史地大意) 등 본국 역사·지리 관련 과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본국'이 중국을 포함하는 것이냐, 대만만을 포함하는 것이냐, 중국과 대만이 절반씩 차지하는 것이냐에 대한 1년여의 논쟁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고등고시 1-3급 행정-박물관도서관리 부분의 『본국근대사연구』 과목은 존치시켰다.

2006년 8월부터 고등학교에 『대만사』 과목을 개설하였고, 교재는 중국 관련 부분을 '중국 대륙' 또는 '대륙'이 아닌 '중국'으로 표기했고, 교재에 '대만 지위 미정론'(臺灣地位未定論)을 명기했다.

2007년 1월 17일 행정원은 「고궁박물관조직조례수정초안」(故宮博物院組織條例修正草案)을 「고궁박물관조직법」으로 수정하면서 소장품이 '북평고궁'(北平故宮)과 '중앙박물관'으로부터 왔다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중국 고대 문물예술품의 수집, 연구 및 홍보를 강화한다." (加強對中國古代文

7)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사실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주장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것이기에 번잡을 피해 가급적 명시하지 않고자 한다.

物藝術品之徵集研究闡揚)는 표현을 “국내의 문물과 예술품의 수집, 연구 및 홍보를 강화한다.”로 수정하였다.

2007년 1월 29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제2책인 『중국사』에서 손중산(孫中山, 孫文)을 ‘국부’(國父)로 칭하지 않기로 하였고, ‘아국’·‘본국’·‘대륙’을 ‘중국’으로 개칭하고, 한나라가 흉노를 ‘정벌’(征伐)했다거나 ‘정토’(征討)했다는 표현을 ‘공격’(攻擊)했다고 표현했고, ‘진시황이 6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했다’(秦始皇并滅六國, 統一天下)는 표현에서 ‘천하를 통일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2007년 6월 초 대만 교육부는 대만역사학회에 의뢰하여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써서는 안 될 용어」(教科書不當用詞檢核) 5,000개를 선정하여 출판사에 통보했다.⁸⁾

이로써 역사 분야는 본토화를 통해 중국사로부터 대만사로 완전 독립시켜 ‘역사기억’을 회복시키고 ‘대만사관’을 정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어문 분야

대만 교육부는 2001년부터 모어 교육과 향토화 교육을 추진하여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민남어(閩南語), 객가화(客家話) 및 원주민어 중 1개 언어를 반드시 이수토록 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향토언어’ 과목을 설치해 대만의 각 언어를 학습토록 하였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인식대만』(사회편/역사편) 교재로 대만의 역사와 사회를 교육의 중심으로 삼았다.

2002년 7월 10일 국어(國語, 漢語)의 발음표기 방식으로 기존의 웨이드방식을 대체하여 개발한 통용병음(通用拼音)을 채택하고 중국의 한어병음(漢語拼音)을 채택하지 않았다.

2004년 12월 교육부가 공포한 「고교국문과정강요」(高中國文課程綱要)는 어문 과목을 매주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하고, 문언문의 비중을 평균 65%에서 45%로 축소했다. 아울러 『논어』를 중심 내용으로 한 『중국문화기본교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개편했다.

2007년 2월 2일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는 「국가언어발전법초안」(國家語言發展法草案)을 공포하였는데, 대만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연어와 수화를 국가언어로 규정하였다. 이는 결국 화어(華語), 객가어, 민남어 및 원주민어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원은 이것이 탈국어화(去國語化)나 탈중국화가 아니며, 관방언어 제정이 아니라고 했다. 2009년 12월 현재 이 초안은 아직 정식 공포되지 않았다.

2008년 2월 13일 교육부가 공포한 「초중9년일관과정강요」(國民中小學九年一貫課程綱要) 수정

8) 수정 대상의 예로는 다음이 있다: 中共→中華人民共和國, 海峽兩岸→海峽兩國, 臺灣省→臺灣, 臺灣地區→臺灣, 國劇→中國京劇, 明代→中國明代, 國字→中國文字, 國畫→中國水墨畫, 國父→孫中山, 古人說→中國古人說, 中日戰爭→清日戰爭, 外省人→中國各省隨中華民國政府遷臺人士 또는 新住民.

초안은 국어문 과정의 문언문 비중을 기존의 일률적인 15-35%에서 7학년 10-20%, 8학년 20-30%, 9학년 25-35%로 수정하기로 했다.

어문, 특히 언어 분야에서의 본토화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대만은 '국어'는 고급언어(high language), 민남어는 중간언어(mid language), 객가화와 원주민어는 저급언어(low language)로 위상이 정립된 다중언어사회(multilingual society) 상태이다. 기존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국어'의 '화어'(華語)로의 개칭이 2010년에 예정되어 있지만, 그 언어가 국가공용어일지 관방언어일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민남어의 3할은 음은 있되 글자가 없고(有音無字), 객가화와 원주민어는 말만 있고 글이 없어(有語無文) 완전한 기록이 불가능하다.

3) 법률 분야

2006년 10월 25일 행정원은 「민법」 총칙 제22조 및 「시행법」 제12조와 제13조상의 “중국 법률에 복종할 의무”(服從中國法律義務) 등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여 처음으로 법률상 탈중국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7차례의 「헌법증수조문」(憲法增修條文)의 전문에는 빠짐없이 “국가 통일 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爲因應國家統一前之需要)라는 조건이 달려있었다. 2005년 「증수조문」 제11조는 “자유지구와 대륙지구간 인민 권리의무 관계 및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해 법률로 특별히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이 조문에서 통일의 대상은 자유지구 대만과 ‘고유강역’인 대륙지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정 헌법은 계속 ‘하나의 중국을 위한 헌법’(一中憲法)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중국’의 정통정부가 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만의 대외행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제할 수 있는 한, “대만은 독립하지 못한 것이고, 주권이 독립된 것도 아니고, 독립된 주권을 가진 것도 아니다.”(巴布, 2007, 2/9). 다시 말해, 기존의 헌법 수정으로는 대만본토화나 대만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새로운 대만헌법의 제정과 그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이 있어야 완전한 본토화가 가능할 것이다.

4) 영토 분야

2004년부터 관방에서 제작하는 「중화민국전도」(中華民國全圖)에서 실제 통치하지 않는 중국이 제외되었고, 수도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교육부가 초등학교와 중학생이 사용하는 국정(國編) 교과서에 수도를 대북시(臺北市)로 표기토록 했다(“中華民國中央政府位於臺北”, “中華民國都會在臺北”). 1947년 「중화민국헌법」 시행이래 수도 규정이 없었으나 교과서에는 남경(南京)을 수도로 표기했고, 대북은 ‘전시 수도’로 불리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의 영토를 1934년 10월 16일 입법원에서 통과되어 1936년 5월 5일 국민당정부가 공포한 「오오헌법초안」(五五憲草)의 규정대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몽골공화국 및 러시아 당노오량해지구(唐努烏梁海地區)와 함께 대만까지 포함시켜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헌법이 수정되고 2005년에는 국민투표에 의한 영토변경 방식이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

2002년 행정원과 내정부는 몽골의 독립 현상을 정식 승인하였으나 헌법상으로는 여전히 외몽고와 당노오량해지구까지를 중화민국의 영토 범위로 삼고 있다. 한편, 중화민국의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 시행세칙」(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은 1992년 7월 제정 당시에는 대륙지구를 '대만지구 이외의 중화민국 영토'라고 규정했으나, 그 후 '중공이 통제하는 지구 및 외몽고 등'이라고 수정했고, 2002년 1월 수정안은 '중공이 통제하는 지구'로 한정했다.

영토 분야의 본토화는 국민투표에 의한 영토변경과 헌법 명기 등의 힘든 절차가 남아있다.

5) 국가·정부조직 및 대만인 신분 분야

대만 정부는 이등회 총통 집권 기간인 1997년 7월 제3차 국민대회의 제4차 헌법 수정에서 성(省)을 폐지한다(精省, 凍省, 廢省)는 내용을 통과시켜 1998년 12월 21일 자로 성정부(省政府)를 중앙정부의 파출기관 및 자문기관으로 강등시켜 지방자치 기능을 폐지하였고, 동시에 성의회 의원과 성장의 선거를 폐지했다. 1999년부터 성립(省立) 조직과 기구의 명칭을 국립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2006년 2월 28일 국가통일위원회(1990년 10월 7일 설립)의 업무를 종료시켰고(終止, cease to function), 1991년 3월에 반포되었던 「국가통일강령」(國家統一綱領)을 폐기했다. 진수편은 2000년 5월 20일 총통 취임식에서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 21일 새로운 신분증(中華民國國民身分證)을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증을 전면 사용토록 했다. 과거 신분증은 과거 조상의 발상지(祖居地)인 적관(籍貫)을 표시했으나 새 신분증은 출생지만 표기하여 4대 종족으로 구성된 대만인들의 정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신분증의 명칭이 여전히 중화민국국민신분증이어서 그 효과는 반감되었다.

국가 및 정부 기구, 대내적 국민 신분 등의 본토화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완전한 본토화, 즉 완전한 국가 건설(state building)을 위해서는 국호 정명, 헌법 제정 및 유엔 가입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Ⅳ. 정명운동과 탈중국화

1. 정명운동의 추진과 전개

정명운동은 대만독립 성향의 범록연맹(泛綠聯盟, 民進黨·臺灣團結聯盟·新國家連線·建國黨)의 제창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부응한 정명정책은 민진당이 지배하는 총통부와 행정원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와 대립적인 친중국(親中國) 범람연맹(泛藍聯盟, 中國國民黨·親民黨·新黨·中華愛國同心會·中華統一促進黨)은 정명운동을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제정'(公投制憲)과 '법리상 대만 독립'(法理臺獨)이 제지당한 후 들고 일어난 '탈중국화운동' 행위 또는 '문화대만독립'(文化臺獨)이라 규정하고,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다.

대만독립건국연맹 미국본부 주석인 허세모(許世模)에 따르면 정명운동은 6대 책략과 절차를 갖고 있다. 첫째, 국가와 정부의 정명으로서 제헌을 통해 현재의 중화민국 국호를 고치고, 공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국호를 '대만', '대만국', '대만공화국' 또는 다른 명칭으로 할지를 결정한다. 둘째, 민간단체의 정명이다. 예를 들어, 중화부련회(中華婦聯會)를 대만부련회(臺灣婦聯會)로 정명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정명이다. 예를 들어, 『중국시보』(中國時報) 또는 중국신탁집단(中國信託集團)의 이름에서 중국 명칭을 버리도록 권장한다. 다섯째, 대만의 외국주재 기관의 정명이다. 예를 들어, 주워싱턴 대북경제문화대표처는 대만대표처로 정명해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대만이 이미 독립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吳行健, 2002, 1/1). 이와 같이 대만의 정명운동의 목적은 단순한 식민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주권이 독립된 대만민족 국가의 건립이다.

2002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정명운동은 2006-2008년間に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움직임이 있었다.

1997년 8월 대만독립주의자 고준명(高俊明)·황소당(黃昭堂) 등이 '대만공화국' 운동을 전개하면서 "대만 정명을 추동하고, 중화민국 국호를 폐지하여 점차 대만공화국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5월 8-9일 민진당 제8기 제2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제정된 「대만전도결의문」(臺灣前途決議文)의 7개 주장에서는 대만은 주권이 독립된 국가임을 명시했으나(제1 주장) 정명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다만 설명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중화민국' 명칭의 사용을 견지하지 않고 서로 다른 명칭으로 각종 관방 또는 비관방 국제조직에 널리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여 국명 정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民進黨, 1999, 1/2-2/2).

2000년 5월 20일 총통 취임식에서 진수편은 통독문제(統獨問題)에 대해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중공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 임기 내에 독립을 선포하지 않고, 국호를 개정하지 않고, 양국론(兩國論)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현상(現狀)을 변화시키는 통일·독립 국민투표를 추동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는 문제는 없을 것을 보증한다.”

2001년 12월 29일 대만신세기문교기금회(臺灣新世紀文教基金會)는 「대만정명: 대만 인민의 기본권리」 세미나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금회는 단기적으로 국가기구로 '정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 명칭상 '中華', '中國' 및 'China'가 들어간 것을 삭제하고, 여권에 '臺灣(Taiwan)'을 명기하고, 모든 외국주재 기관과 국가대표단 그리고 각종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간행물상의 학술논문에 '中華', '中國', 'China'로 표기된 것은 모두 '臺灣(Taiwan)'으로 고치고,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명기된 Chinese Passport를 Taiwan Passport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적으로는 각종 민간단체와 기업의 명칭상 '中華' 또는 '中國'이 포함된 것을 수정토록 촉구하고, 장기적으로는 2004년 총통 선거 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수정 또는 헌법 제정과 명실상부한 국호 선택을 촉구했다. 정명을 해야 대만 주민의 국가정체성 혼란을 막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국제사회의 오인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臺灣新世紀文教基金會, 2001, 4-6).

2002년 5월 11일 대만독립건국연맹을 중심으로 한 대만정명운동연맹은 7개 호소(訴求)를 발표하였다: ①우리는 대만이 우리 자신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우리는 모두 대만인이다. 대만인의 국가는 대만이라 불린다. 전 세계 각국 정부 및 인민(중국 정부 및 인민 포함)에게 우리를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부르고, 우리의 국가를 중국이 아닌 대만이라 부를 것을 요구한다. ②대만을 주제로 하는 각급 학교 교과서를 다시 정정(訂定)하여 우리의 아랫세대에게 대만이라는 이 땅에 대해 일치된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대만인이 된 것을 영예로 생각하도록 교육시킬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③중유(中油), 중강(中鋼) 및 화항(華航) 등 국영기업이 솔선하여 '中國/ China, 中華/ China' 명칭을 고칠 것을 요구한다. ④사회단체 등기를 주관하는 내정부는 대만 경내에서 등기하는 사회단체 본부의 명칭에 '中國/ China'를 쓸 수 없게 하고, 가급적 '臺灣/ Taiwan'을 쓰도록 권장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 등기를 주관하는 경제부는 대만에서 설립되는 기업의 본사 명칭 중 중국 지사에 '중국상'(中國商) 또는 '중상'(中商)을 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中國/ China'를 쓸 수 없게 하고, 가급적 '臺灣/ Taiwan' 명칭을 쓰도록 권장할 것을 요구한다. ⑤이미 등기한 사회단체와 기업의 '中國, 中華/ China' 명칭을 일정 기간 내에 수정할 것을 권장하는 입법을 요구한다. ⑥정부의 외국주재 대표처에 'Taiwan' 명의로 간판을 달고, 'Taiwan' 명의로 유엔 및 기타 국제사회 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⑦대만 신 헌법 제정과 국호의 '대만국' 또는 '대만공화국'으로의 갱신을 추진하길 요구한다.

이등휘 전 총통은 서면 치사를 통해 종족의 구분 없이 대만이 자신의 국가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신대만인' (新臺灣人)이며, 대만은 주권이 독립된 국가이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2년 11월 17일 대만정명운동연맹은 고평시(高雄市)의 시위에서 "대만은 국가의 이름이며, 정명은 어머니의 꿈이다." (臺灣是國家の名, 正名是母親의夢)라고 주장했다. 부총통 여수련(呂秀蓮)은 '중국' 명칭을 달고 있는 기업과 단체가 먼저 개명하길 바라며, 1971년 10월 25일의 유엔총회 2758호 결의문으로 중화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퇴출되어(to expel forthwith the representatives of Chiang Kai-shek) 중화민국은 국제적으로 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제사회로 나가려면 대만은 반드시 진정한 국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평시장 사장정(謝長廷)은 대만은 절대로 중국의 일부가 아니고 대만과 중국은 각각 '한쪽의 한 국가' (一邊一國家)라고 하였다.

2003년 9월 6일 대만정명운동연맹이 주최한 시위에서 이등휘 전 총통은 "현재의 중화민국은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영토가 없고 다만 국호를 대만에 걸어놓았을 뿐, 중화민국은 이미 사라졌다. 중화민국은 다만 국호일 뿐 국가가 아니다. 대만은 잠시 국가의 이름을 중화민국에 빌려주었을 뿐이다. 당초 중화민국이 성립되었을 때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1949년 중화민국이 대만을 군사 점령한 것으로서, 대만은 국제지위가 미정된 무주토지(無主土地)이지 중화민국의 토지는 아니다. 대만은 대만 인민의 소유이다. 중국 대륙이 중공에 점령당한 후 중화민국은 이미 영토를 잃고 국호만 남았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배제하고 유엔의 중국 대표권을 차지한 뒤 중화민국은 사라졌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유일한 가능한 방법은 정명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국가는 대만이다. 정명이 성공하는 날이 바로 대만의 정상화가 성공하는 날이다."라고 주장했다.

연맹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①외교부는 대만이란 명칭으로 유엔 가입을 신청하여 조속히 유엔의 회원국이 되어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선포하라; ②외교부는 일정을 정하여 정부의 외국주재 대표처를 대만으로 정명할 것을 선언하라; ③정부 관련 기관은 일정을 정하여 국영기업 정명 작업을 추진하라; ④입법원은 국영기업 정명 작업을 통과시켜라; ⑤2004년 총통선거에서 '대만과 중국은 각자 한 나라' (臺灣中國一邊一國)라고 주장하는 후보를 결연히 지지하여 본토 민주정권의 연장을 꺾을 것이다; ⑥2004년 총통 당선자는 일정을 정하여 제헌위원회를 조직하여 '신헌법 제정과 대만 국가 정명'을 추진하라; ⑦2004년 5월 9일 어머니날에 '행동총통부, 주심신국가' (行動總統府, 走尋新國家) 활동을 거행하여 대만 인민의 보다 굳건한 입장을 보여라.

2004년 10월 1일 대만정명운동연맹과 대만단결연맹은 대만은 중화민국의 '겉옷' (外衣)을 벗어 버리고 '대만국'으로 정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강철, 중국조선 및 중화항공을 찾아가 대만강철, 대만조선 및 대만항공으로의 정명을 요구했다.

2004년 12월 4일 대만단결연맹이 주최한 정명·제헌·대만국대(正名·制憲·臺灣國大) 시위에서 이등휘 전 총통은 “정명제헌(正名制憲)은 대만 건국의 중요 과정이며” “중화민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화민국헌법」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만헌법」을 다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12월 5일 진수편 총통은 기자회견에서 ‘국호’를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2년의 시간에 걸쳐 외국주재 기관의 명칭을 ‘대북대표처’(臺北代表處)에서 ‘대만대표처’(臺灣代表處)로 정명하고, 대내적으로는 중국과 혼동되는 관련 기구의 명칭을 2년 내에 정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명의 3대 중점은 첫째, 대만 명의로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 둘째, 외국주재 기관 명칭을 ‘대만대표처’로 정명하는 것, 셋째, 국영과 공영 기구 관련 명칭을 하나하나 정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련 기관의 정리에 따르면 현행 대만 법규에 ‘중국’이란 글자가 포함된 것이 30종 이상이고, 조약협정 명칭에 ‘중국’을 사용한 것이 34종인데, ‘대만 주체성’ 확립을 위해 입법원 및 국제협상을 통해 정명할 것이라고 했다.

2006년 2월 21일 민진당 입법위원 채동영(蔡同榮) 등 30여 명은 ‘중정기념당’을 ‘대만민주기념관’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했다. 채동영 등은 2007년 2월에도 역사지위 정명, 교육 정명, 관방단위(官方單位) 정명, 외국주재 기관 정명 및 국제조직 정명 등 ‘오정운동’(五正運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07년 8월 1일 민진당 정책회가 「정상국가결의문」(正常國家決議文) 초안을 마련하였는데, 대만은 주권이 독립된 국가로서 중국과 서로 예측하지 않으며 국호를 ‘대만’으로 정명하고 가급적 조속히 신 헌법을 제정하기를 주장하였다. 이는 「대독강령」(臺獨綱領, 1991.10)과 「대만전도결의문」(臺灣前途決議文, 1999.5.8)에 이은 민진당의 대만 본토화운동 심화 조치였다. 2007년 8월 27일 민진당 중앙집행위원회(中執會)는 「정상국가결의문초안」을 발표하고 9월 30일 민진당 전대회(全代會)에 넘겼다. 「초안」은 서두에 “대만은 주권이 독립된 국가로서 중국과 서로 예측하지 않으며 서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이어 “중국국민당의 권위(威權)와 중국 패권의 대내외 도전으로 대만의 국가 정상화의 5대 위협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국제관계 비정상, 헌정체제 비정상, 국가 정체성 비정상, 사회정의 비정상, 정당경쟁 비정상 등 5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명, 헌법 제정, 유엔 가입, 정의 전환 실천 및 대만 주체성 건립 등의 행위로 대만을 정상 국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초안」은 5가지 주장을 제시했는데, 본토화 및 정명과 관련된 것은 앞 부분의 3개 항이다: 첫째는 ‘운명공동체’라는 대만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대만 민주가치를 심화하고, 대만의식을 강화하고, 아울러 적당한 시기에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대만이 주권이 독립된 국가임을 드러내야 한다. 둘째, ‘중화민국’이란 국호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만’ 명의로 유엔이나 세계위생기구 등 국제조직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본국은 ‘서기’(公元)를 기원으로 하여 세계와의 연계(接軌)에 편리토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만

국가 정체성과 토지 정체성을 촉진하고, 본토문화 및 모어를 적극 추동하고, 학교 과정(課程)에서의 교육 대만화를 실현해야 한다.

2007년 12월 8일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들이 '폐오정운동'(廢五正運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정(中正)으로 명명된 도로(예, 中正路), 학교(예, 中正國小·中正國中·中正高中·中正大學), 군사장비(예, 中正號 전투기), 공공건축과 지역(예, 中正堂·中正公園), 행정구역(예, 中正區) 및 공공기관(예, 中正第一分局)의 명칭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대만의 정명운동 추진은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중국의 반대와 위협, 이를 이유로 내세운 국민당 등 대만 내 통일파의 반대, 대만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비지원, 개명에 따른 영업 손실을 두려워한 기업 등의 저항 등에 따라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외국주재 기관의 '대만 대표처' 정명도 해당 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거의 성과가 없었고, 국호(국명)의 정명도 성공하지 못했다. 진수편 총통은 그동안 "중화민국이 바로 대만이며, 대만은 바로 중화민국이다.", "중화민국의 가장 좋은 약칭은 바로 대만이다."라고 선언하였거나, 여권에 '중화민국(대만)'이란 표기로 개칭하였거나, 유엔에 '대만 대통령'의 명의로 가입을 신청하거나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2. 정명의 사례와 내용

정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1994년 8월 1일 공포된 국민대회 제3차 「헌법증수조문」(憲法增修條文)은 그동안 오용된 '산지동포'(山胞) 대신 '원주민'을 사용하였고, 1998년 6월 17일 공포된 「원주민교육법」에서 '원주민족'을 처음 사용하여 정명의 시범을 보였다. 그 외 1996년 3월 21일 대북시장 진수편(陳水扁)은 총통부와 중국국민당 본부 사이의 도로인 '개수로'(介壽路)가 '장개석 장수'(蔣介石長壽)에서 취한 것이라고 보고 대북 원주민을 기려 '개달격란대도'(凱達格蘭大道, Katagalan Boulevard)로 개명했다. 그러나 2007년 5월 2일 국민당이 장악한 대북시정부는 진수편을 비판하여 '반탐부대로'(反貪腐大路)로 개명하고, 12월 6일에는 '반탐부민주광장'(反貪腐民主廣場)이란 표지판을 달았다.

그동안 진행된 정명 사례는 위에 언급된 도로 및 지역 명칭의 정명 외에 국가기관 명칭의 정명, 군 관련 정명, 국영기업 및 기구 명칭의 정명, 대학 명칭의 정명, 여권 표기의 정명, 중국 명칭의 정명 등으로 나뉜다.

1) 국가기관 명칭의 정명

2005년 7월 30일 총통부 및 총통부의 인터넷사이트 명칭을 '중화민국(대만)총통부'(中華民國

(臺灣)總統府)로 개칭하고, 영문은 “Office of President, Republic of China” 뒤에 “(Taiwan)”을 추가하였다. 행정원의 사이트는 영문 국명 뒤에 “(Taiwan)”을 추가했을 뿐이었다. 행정원 산하 각 부는 추가하지 않았고, 입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의 사이트는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당이 재집권한 2009년 12월 현재 총통부 사이트의 중문 명칭은 “(臺灣)”이 삭제되었고, 행정원은 “行政院 Executive Yuan”, 입법원은 “立法院 The Legislative Yuan of Republic of China”, 사법원은 “司法院 Judicial Yuan”, 고시원은 “考試院 The Examination Yuan of R.O.C.”, 감찰원은 “中華民國監察院 Control Yuan of R.O.C.”로 표기되어 있다.

2006년 3월 25일 총통부 정문 팻말을 ‘장개석 60 대수’ (蔣介石60大壽)를 의미하는 ‘개수관’ (介壽館)에서 ‘총통부’ (總統府)로 바꾸었다.

2007년 2월 12일 진수편 총통이 ‘중화우정’ (中華郵政)을 ‘대만우정’ (臺灣郵政)으로 개명했으나, 입법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민당이 재집권한 뒤인 2008년 8월 1일에 다시 ‘중화우정’으로 개명되었다. 2007년 2월 28일 발행한 228국가기념관 개관기념 우표에는 ‘대만우표’로 명기했다.

2) 군 관련 정명

2004년 10월 25일 민진당 입법위원 채동영(蔡同榮) 등은 국방부의 대표전화(교환대, 總機)를 ‘강소일호’ (江蘇一號) 및 ‘상해총기’ (上海總機)라고 하고, 육군 10군단을 ‘호남총기’ (湖南總機)라고 하는 등 중국 지명을 각 군사단위의 대표전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연말까지 개칭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2005년 1월부터 숫자구역번호로 대체하였다.

2005년 1월 20일 입법원은 앞으로 구입하는 잠수함과 함정의 명칭은 모두 대만과 관련된 지명과 인명을 사용하여 중국 함정과 동일한 명칭을 없애도록 결의했다.

2005년 상반기부터 군대에서 취침 전에 부르던 「나는 중화를 사랑한다」(我愛中華)는 등의 군가를 금지했고, 중국 냄새가 나는 부대 명칭(예: 虎嘯, 龍虎, 長城, 雄獅, 普光 등)을 대만 특색이 나도록 개명하였다. 군내의 통일 관련 표어와 구호(예: 統一中國, 復興中華文化, 國家統一萬歲, 中華民國萬歲 등) 사용을 금지시켰다. 육해군 무기에 새겨진 ‘중국육군’이나 ‘중국해군’ 등 글자를 없애도록 했다. 중국 냄새가 나는 해군 Lafayette급 전함 명칭(예: 康定, 西寧, 武昌 → 雞籠, 鹿康, 打狗)을 개명하였다. 2008년 8월 재집권한 국민당정부는 민진당정부가 이미 폐기한 군가(「我愛中華」)를 회복시키려 했으나 해당 군가의 일부 판본에 “消滅共匪”라는 가사가 발견되어 이것이 양안 화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군가는 회복되지 않았다.

3) 국영기업 및 기구 명칭의 정명

2004년 8월 5일 중화민국대외무역발전협회(CETRA)는 중문 명칭은 그대로 두고 영문 명칭 중

China를 Taiwan으로 변경하여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TAITRA)로 개명했다. 2004년 10월 중화민국증권상업동업公會(中華民國證券商業同業公會)는 중문 명칭은 수정하지 않고 영문 명칭은 Chinese Taiwan Securities Association(CTSA)에서 Chinese를 뺐다.

2006년 6월 말 정부 출자 은행인 중국상업은행은 '조풍은행'(兆豐銀行)으로, 중국농민은행은 '합작금고은행'(合作金庫銀行)으로 개명했다.

2006년 9월 6일 행정원은 중정국제공항(中正國際機場, Chiang Kai-shek Airport)을 대만도원국제공항(臺灣桃園國際機場, Taiwan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다. 약칭 TPE(臺北)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해 11월 1일 정식 개명되었다.

2007년 2월 국공영 기업 명칭에 '中國', '中華' 및 'China'가 들어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臺灣'이나 'Taiwan'으로 개명토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중국강철(中國鋼鐵), 중국석유고빈유한공사(中國石油股份有限公司→臺灣中油股份有限公司), 중국조선고빈유한공사(中國造船股份有限公司→臺灣國際股份有限公司), 중국수출입은행(→輸出入銀行, The Export-Import Bank of ROC), 중국국제상업은행(→2006년 8월 兆豐國際商業銀行), 중국농민은행(→2006년 5월 合作金庫商業銀行으로 통합), 중화전신(中華電信→Chunghwa Telecom Co., Ltd.), 중화우정(中華郵政), 중화항공(中華航空, 미개명), 중화개발(中華開發, 미개명), 중화전시(中華電視, 미개명) 등이 있다. 중앙신탁국(中央信託局, Central Trust of China, 2007년 1월 대만은행에 흡수)과 화교은행(華僑銀行, Bank Of Overseas Chinese, 2007년 12월 花旗銀行에 흡수)은 영문 명칭에 China가 있어 대상이 되었다. 정부 출연 각종 기금회(예: 中國童子軍基金會, 中華經濟研究基金會 등)도 대상이 되었다.

2007년 3월 2일 행정원은 중정기념당(中正紀念堂)을 대만민주기념관으로, 중정기념공원은 대만민주공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5월 19일 대만민주기념관과 대만민주공원 현판식이 열렸다. 국민당정부 행정원은 2008년 5월 '대만민주기념관'을 다시 중정기념당으로 개정하고 2009년 7월 20일 '중정기념당' 편액을 다시 걸었다.

4) 대학 명칭의 정명

2005년 1월 19일 행정원이 교육부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와 해외 교포학교에 '中國'이나 '中華' 또는 'China'나 'Chinese'가 포함된 명칭의 정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는 즉시 국립교생대학선수반(國立僑生大學先修班→2006년 1월 국립대만사범대학에 흡수됨), 사립중국의약대학(미개명), 사립중국문화대학(미개명), 사립중화대학(私立中華大學, Chung Hua University, 미개명), 사립중국해사상업전과학교(私立中國海事商業專科學校→2007년 8월 臺北海洋技術學院으로 개편), 사립중국기술학원(2005년 8월 중국과기대학으로 개명), 사립중화기술학원(2009년 중

화과기대학으로 개명), 사립교광기술학원(私立僑光技術學院, 2007년 2월 僑光技術大學Overseas Chinese University로 개명), 사립중화의사학교(私立中華醫事學校, 2007년 中華醫事科技大學으로 개명) 등 9개 대학에 특급 문건을 보내 20일 오후 5시까지 정명 의견을 회신토록 했다. 2006년 9월 1일 국방대학 중정이공학원(中正理工學院)의 명칭을 국방대학 이공학원으로 개명했다.

5) 여권 표기 및 중국 명칭의 정명

2002년 5월 30일 입법원 외교위원회는 외교부에게 여권 겹표지 Passport 앞에 Taiwan을 추가하여 Taiwan Passport가 되도록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2003년 9월 1일부터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여권 겹표지의 국휘(國徽)와 '호조'(護照) 글씨 중간에 'TAIWAN'을 부기하기로 했다. 단, '臺灣'을 병기하지는 않았다.

고시원(考試院)은 2002년 11월 7일 2003년도 공무원 고등고시 1급과 2급 박물관도서관리 부문 응시과목 중 '中國' 명칭이 붙은 과목은 모두 중성적인 '本國'으로 개칭할 것을 결정하면서 『중국근대사연구』 과목은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본국근대사연구』로 개칭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당이 집권한 2009년 4월 30일 '본국'이 중국인지, 중화민국인지, 대만국인지 통독(統獨)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하여 고등고시 2급 행정-박물관도서관리 부문의 『본국근대사연구』 과목을 다시 『중화민국사연구(대만사연구 포함)』(中華民國史研究(包括臺灣史研究))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분야 1급의 『본국근대사연구』와 3급의 『본국정치체도사』, 『본국근대사』, 『본국사학사』 및 『본국문화사』 등은 그대로 두었다.

2004년 11월 8일 외교부장은 입법원 외교위원회에서 외교부는 앞으로 대내외 공문에 '大陸' 또는 '中共' 대신 '中國'으로 명기하겠다고 했다.

2008년 5월 「민법」 총칙 수정 조문은 '중국'을 모두 대만을 의미하는 '아국'(我國)으로 표기토록 했다. 2008년 2월 13일 교육부는 「초중9년일관과정강요」(中小學九年一貫課程綱要)를 통해 국어 교재상의 '중국문자'는 '한자'(漢字)로, '국어문'(國語文)과 '중문'(中文)은 '화어문'(華語文)으로, '대만문학'과 '향토문학'은 '본국문학'으로, '중화문화'는 '본국문화'로 수정하여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어', '국문' 및 '국어문'(國語文)이란 과정 명칭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정명운동의 최종 목표는 '대만' 명칭의 유엔 가입을 통한 주권독립 국가의 건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7월 19일 진수편 총통은 처음으로 'President of Taiwan'의 명의로 유엔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반기문 사무총장은 'Taiwan is part of China'를 이유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당 총통 후보인 마영구(馬英九)는 "대만은 중화민국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민진당에 대항하여 9월 19일 '중화민국' 명칭의 유엔 복귀(返聯)를 위한 국민투표(返聯公投)를 주장하였

다. 이에 2008년 3월 22일 총통선거와 동시에 민진당이 제기한 ‘(대만 명의의)유엔 가입’ (入聯公投) 안과 국민당이 제기한 ‘(탄력적인 명칭에 따른)유엔 복귀’ (返聯公投) 안에 대한 제5차, 제6차 전국국민투표(全國性公民投票)가 각각 94%와 87%의 모순되는 찬성율을 보였으나, 선거법상 유권자 중 투표인수 50% 미만으로 모두 부결되었다.

V. 맺음말

대만의 대표적인 탈식민주의자인 진방명(陳芳明)은 대만의 탈중국화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광복’ 이후의 국민당 정권은 일본 식민자와 동류의 식민정권으로서 중화민족주의로 대만에 식민통치를 진행했다. 국민당 계엄체제가 대만의 역사·문학·언어·문화 등을 의도적으로 압제하고 왜곡하고, 대만문학을 금고(禁錮)시킨 것은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묘사한 서구 백인의 식민책략과 같이 상상·담론·실천 3개 방면에서 진행한 계획적인 권력 간섭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당권자는 대만의 역사 경험의 틀을 지나치게 왜소화시켜대만의 역사를 방대한 중국 담론 속으로 인물시켰다(陳芳明, 2007, 9-20).

이와 같이 대만의 탈중국화운동은 중국(중화민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을 식민제국으로 설정하고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탈중국화는 탈식민주의의 한 사례로 인정된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보면, 탈중국화는 결국 중화민국 또는 중국이라는 제국을 Salman Rushdie의 말대로 ‘되받아 쓰는데’ (writing back, counter-narratives) 탈식민의 행동이라고 본다. ‘되받아 쓰기’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식민적 담론 행위)에 의해 정전(canon)으로 읽혀지고 불렀던 텍스트들을 다시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쓰는 작업이다. 역사를 다시 읽고 텍스트를 재해석하면서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반담론 또는 저항담론 행위를 통해 제국적 지배담론을 파헤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대만의 탈중국화운동이 중국문화를 패권문화와 압제문화로 규정하고 대만문화를 이상화하거나 낭만화하려는 경향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의 탈중국화운동은 단순히 비중국화(非中國化)나 순대만화(純臺灣化)가 아니고, 여러 문화의 우수한 점을 수용하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화해(和譜)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지향한다. 따라서 탈중국화는 ‘탈중국중심화’를 통한 ‘대만중심화’(臺灣中心化)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탈식민주의가 단순히 반서구문화가 아니듯이, 탈중국화도 단순한 반중국화가 아니다. 탈중국화는 중주-부속, 식민-피식민, 중심-주변, 자아-타자 등 주객의 이원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고 대만을 주체로 하는 체제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만의 ‘탈중국화’ 담론의 주요 논점을 다시 정리하자면, 대만은 중국문화와 달리 개방되고 진보된 해양문화라는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중국문화는 대만문화의 일부일 뿐이다; 중국

문화는 보수적이고 낙후한 대륙문화로서 대만은 중국문화에 정체감을 갖지 않는다; 중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은 중국에 이용되어 문화패권을 행사하게 만든다; 역사, 언어 및 종족 등에 대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 형성을 통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민족국가의 건립이 탈중국화의 최종 목표이다. 즉 현재의 중화민국 체제를 극복하고 국호를 대만으로 정명하고, 신 헌법을 제정하고,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주권이 독립된 대만민족국가를 건립하자는 것이었다.

2000년대 대만의 탈중국화운동은 본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다. 어문 규정, 법률(헌법 제정 등), 영토 범위 확정, 국호 제정, 유엔 가입 등의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다. 2008년 3월 22일 국민당 총통후보 마잉구(馬英九)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고 5월 20일 총통으로 취임하면서 대만독립주의자들의 본토화운동 및 정명운동 등 탈중국화운동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고, 국민당정부의 '반정명운동' (反正名運動), '탈진수편화' (去扁化) 및 '재중국화' (再中國化, re-sinicization)를 통한 '발란반정' (撥亂反正)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토화론자들의 탈중국화운동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시 부활하여 심화될 수 있는 미완의 운동이라고 본다.

K C I

〈참고문헌〉

- 김성곤. 1997. “탈 중심 경향과 Postcolonialism 문학.” 『인문과학』(성균관대), 제27집.
- 박종성. 2006.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파주: 살림출판사.
- 홍덕선. 2006. “탈식민주의 담론과 문화적 융합주의.” 『인문과학』(성균관대), 제37집.
- 郭洪紀. 2002. 『臺灣意識與中國情節』. 臺北: 黎明出版社.
- 邱貴芬. 1992a. “‘發現臺灣’.” 『中外文學』, 第21卷 第2期(7月).
- _____. 1992b. “‘拍攏是臺灣人’.” 『中外文學』, 第21卷 3期(8月).
- _____. 1995. “是後殖民, 不是後現代.” 『中外文學』, 第23卷 第11期(4月).
- _____. 2000. “‘後殖民’的臺灣演繹.” 臺灣文學研究工作室(2000.08.11上網),
<http://ws.twl.ncku.edu.tw/hak-chia/k/khu-kui-hun/taioan-sitbin.htm>.
- 邱垂亮. 1987. “‘政治結’的互動關係.” 『民衆日報』(臺灣), 9月 16日.
- 臺灣新世紀文教基金會. 2001. “臺灣正名.” 『新世紀智庫論壇』, 第16期(12月).
- 孟 樊. 1994. “後殖民論述的文學觀.” 『聯合文學』, 第10卷 第8期(6月).
- 民進黨. 1999. “臺灣前途決議文.”
<http://www.dpp.org.tw/policy/pub/News.asp?ctyp=NEWS&catid=2085&ctxid=2318>.
- 史 明. 1980. 『臺灣四百年史』. 臺北: 自由時代週刊.
- _____. 1988. 『臺灣獨立的理論與實際』. 高雄: 南冠出版社.
- _____. 2001. 『臺灣民族主義與臺灣獨立革命』. 臺北: 前衛出版社.
- 施啟輝編. 1998. 『臺灣意識論戰選集』. 臺灣版. 臺北: 前衛出版社.
- 施正鋒. 1999a. “臺灣意識的初探.” 夏潮基金會編. 『中國意識與臺灣意識: 1999年澳門學術研討會
論文集』. 臺北: 海峽學術出版社.
- _____. 1999b. “臺灣意識的探索(上).” 臺灣獨立建國聯盟網,
http://www.wufi.org.tw/republic/rep1-10/no10_15.htm.
- _____. 2002. “正名運動與民族認同的建構.” 『新世紀智庫論壇』, 第19期(9月).
- 楊長鎮. 2005. “本土化論述與中華文化認同.” 施正鋒主編. 『臺灣國家認同』. 臺北: 國家展望文教基
金會, 39-62.
- 吳行健. 2002. “獨盟美國主席許世模.” 臺灣獨立建國聯盟網,
http://www.wufi.org.tw/republic/rep21-30/no25_08.htm.

- 廖朝陽. 1992. “是四不像, 還是虎豹獅象?” 『中外文學』, 第21卷 第3期(8月).
- 韋政通. 1994. “臺灣意識與民族主義.” 劉青峰編. 『民族主義與中國現代化』.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 游勝冠. 2006. “國家認同與九〇年代的臺灣文學論戰.”
<http://www.tisnet.org/Activity/20060610/conference/3-4.pdf>.
- _____. 2009. 『臺灣文學本土論的興起與發展』. 臺北: 群學.
- 張國慶. 1995. “追尋‘臺灣意識’的定位.” 『中外文學』, 第23卷 第10期(3月).
- 莊萬壽. 2003. “中華國族主義與臺灣國民思想?” 『20世紀臺灣新文化運動與國家建構論文集』. 臺北: 吳三連臺灣史料基金會.
- 莊萬壽·林淑慧. 2003. “本土化的教育改革.” 『國家政策季刊』, 第2卷 第3期(9月).
- 中國論壇社. 1987a. “‘中國結’與‘臺灣結’研討會論文專輯.” 『中國論壇』, 第289期(10月 10日).
- _____. 1987b. “突破中國結與臺灣結的困境.” 『中國論壇』, 第290期(10月 25日).
- 陳孔立. 2005. “臺灣政治的‘省籍-族群-本土化’研究模式.” 孫雲主編. 『臺灣研究25年精粹: 政治篇』. 北京: 九州出版社.
- 陳光興. 1996. “去殖民的文化研究.” 『臺灣社會研究季刊』, 第21期(1月).
- 陳芳明. 1991. “七十年代文學史導論.” 『文學臺灣』, 創刊號(12月); 『典範的追求』. 臺北: 聯經出版社, 1994.
- _____. 1995. “殖民歷史與臺灣文學研究.” 『中外文學』, 第23卷 第12期(5月).
- _____. 1998. 『左翼臺灣: 殖民地運動史論』. 臺北: 麥田出版社.
- _____. 2007. “自序: 我的後殖民立場.” 『後殖民臺灣』. 臺北: 麥田出版社.
- 陳昭瑛. 1995. “論臺灣本土化運動.” 『中外文學』, 第23卷 第9期(2月).
- 巴布. 2007. “臺灣是一個國家?(六).” <http://blog.nownews.com/zs7519/textview.php?file=61711>.
- 黃瓊萩. 2005. 『進出全球化』. 臺北: 翰蘆圖書.
- 黃麗卿. 2002. “論臺灣主體性與去中國化.” 『동아인문학』(한국), 제2집.

Taiwan's De-sinicization Movement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Park, Byoung Seok

This paper regards Kuomintang regime of Republic of China on Taiwan from October 1945 to July 1987 as a colonial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It also analyzes the Taiwan's de-sinicization movement including the localization movement and name rectification campaign fo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end of the 1990s.

This process of Taiwan's de-sinicization is a kind of, and a case of de-colonization. While de-colonization is not a simple movement of anti-western culture, Taiwan's de-sinicization is not a simple process of anti-Chinese culture. It is a Taiwan's independence movement by breaking through the unequal relations of suzerain and vassal,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center and periphery, self and others.

Main arguments of Taiwan's de-sinicization movement is that Taiwan's culture is open to foreign influences, accordingly has its own adoptive characteristics of ocean culture. Therefore Chinese culture is a part of Taiwan's comprehensive culture. Taiwan's culture is not identified with Chinese culture since Chinese culture has a conservative and pre-modern characteristics of continental culture. The identification of Taiwan's culture with Chinese culture may induce China to seek a policy of cultural hegemony toward Taiwan. The final aim of Taiwan's de-sinicization is an establishment of its own nation-state as an imagined political community departed from China.

Key words: post-colonialism, Taiwan, de-sinicization movement, localization movement, name rectification campaign